

부안군,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채널 개설 운영

부안군 지방세 환급금 검색 또는 환급안내문 QR코드 스캔 손쉽게 지방세 환급금 신청

부안군은 군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안군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부안군 지방세 환급금’을 검색하거나 환급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채널에 입장한 뒤 안내에 따라 정보만 입력하면 손쉽게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부안군 지방세 미환급금은 1856건, 약 2700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국세 경쟁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액, 착오 납부,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의 관심 부족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로 국고에 귀속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허미순 재무과장은 “성실 납세의 의무만큼 과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군민 누구나 쉽게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부안읍은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비공모 기획사업으로 선정된 치매예방교구 나눔을 통한 어르신 인지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치매예방 교구 선물꾸러미를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물꾸러미에는 모자이크 모양놀이, 스틱 모양 맞추기, 만다라 색칠북, 인지활동북, 스트레칭 밴드, 마사지볼 등 총 7종의 치매예방교구가 포함됐다.

이영임 기자

공영주차장 운영체계 개선으로 주차편의 높인다

전주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3개소 유료 전환

전주시가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시는 차량 보급률 증가로 시민들의 주차장 확충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민선8기 출범 이후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공영주차장 운영체계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으로 공영주차장은 114개소 5768면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시는 주차회전율을 높여 실제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불

필요한 주차 수요를 감소시키는 등 보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주차장 이용 실태 분석 용역을 토대로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올해 첫 사업지로 서부신시가지 내 3개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을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해당 주차장은 △롯데마트 인근(효자동2가 1229-2) 36면 △신한은행 인근(효자동2가 1237-8) 25면 △보훈청 인근(효자동2가 1243-1) 32면 등 3개소 93면으로, 이들 3개 주차장은 이날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유료

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앞으로 신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도 유료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를 완료한 △전주천서로 매곡교 노상주차장 117면 △조촌동 노외주차장 39면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서신동 선수촌공원 노상주차장 △준공을 앞둔 충경로 노상주차장 △금암동 노외주차장 △예곡 주15 노외주차장 등 4개소 175면 역시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유료화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근 거주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월 정기 주차권과 상가 할인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승민 기자

광주 ‘G패스’ 대중교통 많이 탈수록 혜택 커진다

‘광주 지(G)-패스’ 이용자들은 내년 1월부터 일정한 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탈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광주광역시에는 정부가 도입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광주 지(G)-패스’ 이용 시민에게 두 제도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되는 통합 환급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케이(K)-패스 가입자 중 한 달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환급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정액형 환급제도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일정 금액만 부담

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광주시는 이에 맞춰 ‘광주 지(G)-패스’와 ‘모두의 카드’를 연동해 시민이 별도의 선택이나 추가 신청 없이도 월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더 큰 환급 혜택을 자동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시민이 케이(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스템이 한 달간 총 이용금액을 산정해 ‘광주 지(G)-패스’와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더 큰 제도를 자동 적용한다. 시민은 두 제도를 비교하거나 선택할 필요 없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에 적용되는 환급기준액은

일반형의 경우 4만원부터 5만5000원이고, 플러스형의 경우 7만5000원부터 9만5000원이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GTX 등 광역 대중교통까지 모든 수단에 대해 적용된다.

시는 특히 35세부터 39세 시민도 ‘청년’에 포함된 ‘광주 지(G)-패스’처럼 ‘모두의 카드’에도 동일한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민이 대중교통을 탈수록 가계 부담은 줄고 혜택은 커지는 체감형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권일 기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브랜드 ‘고흥이든’ 개발

고흥(군수 공영민)은 지난 12월 초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흥이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왔다.

군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보고회와 청년농 및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반영된 최종 브랜드를 확정하고, 10월 23일 상표출원을 완료했다.

공동브랜드 ‘고흥이든’에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춘 고흥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믿음직스러운 농산물이라는 정체성을 담았다.

특히 ‘고흥’과 ‘이든(착한, 여진의 순우리말)’을 결합해 브랜드만으로도 고흥의 착한 농산물을 연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브랜드마크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생육환경을 형상화해 안정적이고 고생산성인 고흥 스마트팜 농산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고흥군은 12월부터 스마트팜 혁신밸

리 8기 실습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포장재에 개발한 브랜드를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브랜드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흥이든’이 단순한 농산물 브랜드를 넘어 고흥군 3대 미래전략 산업 중 하나인 스마트팜 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팝업스토어’를 개설해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고흥 스마트팜’과 ‘고흥이든’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스마트팜 농산물 하면 전남 고흥이 떠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은 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 241대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284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자동차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조기 폐차한 참여한 군민들에게 총 4억 8천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우덕현 기자

장수·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해

전북 도비 30% 부담, 2026년도 추경예산 확보…시범사업 성공 추진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수군과 순창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해,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장수군·순창군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비 가운데 도비 30%를 부담해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장수군과 순창군 등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전북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며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수군과 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도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준 김관영 도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고, 순창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순창군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사업비는 855억 600만 원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각각 투입된다.

이 가운데 순창군은 486억 2,000만 원, 장수군은 368억 8,600만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가 16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 (썬모레(Moreh))와 도시·산업용 스마트 기계설비 전문기업 (유한) 국기계설비기술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업은 전북에 생산 및 연구 거점을 새로 구축하고, 총 356억 원(모레 206억·한국기계설비기술 15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호 기자

수산물 유통,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준공

금산군, 임진왜란 호국전적지 공동 협력 업무협약 체결



서 직접 경매가 이뤄지면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은 향후 위판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구시포항을 수산물 거점 항구로 육성한다. 현재 수산물 위판장은 위판장 기능만 수행해야 한다.

이에 고창군과 수협은 향후 어촌관광 구역 지정을 통해 향후 수산물 판매장 등을 운영하면서 신선한 수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어촌 지역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영임 기자

미분양 11개월 연속 감소 주택시장 안정세 진입

익산시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우려를 넘어서며, 점차 안정적 수요 기반을 갖춘 시장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173세대에 달하던 미분양 주택 수가 11월에는 857세대로 줄어들며, 매달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급 축소가 아닌, 지역 내 안정적인 수요에 따른 시장 흡수력 강화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분양 수치에는 시공사 기업 회생으로 분양이 중단된 2개 단지와 임대전환으로 실업주가 끝난 단지까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신규 미분양 물량은 1개 단지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특정 단지를 제외한 전체 시장의 미

분양 해소는, 실수요자가 꾸준히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높은 분양가로 화제가 됐던 부송4지구 C블록도 최근 분양계약을 모두 완료했다.

초기 우려와 달리 입지와 수요가 뒷받침되면 높은 분양가도 흡수 가능한 시장 여력을 증명한 셈이다.

익산시는 이러한 흐름이 익산의 생활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등 정주 환경의 장점이 시장 수요로 이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최근 대단위 아파트 공급과 함께 30대 실수요자 중심의 청년층 전입 확대도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미분양 감소

는 단기간의 일시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 안정 기반 위에서 나타남 흐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주거환경 조성하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는 주택정책을 지속 추진해, 살기 좋고 안정적인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16일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제1회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외국인 유학생과 교직원 등 약 200명이 참여했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우수·장려 등 4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이채봉 기자